

1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2%대 상승

고환율에 기름값이 상승 이끌어
쌀 45%·사과 30%·쌀 15% 올라
먹거리 중심 체감물가 상승폭 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며 기름값을 중심으로 2%대 상승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달 기록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폭을 유지했고, 전남 역시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1로 전년 동월

(114.61) 대비 2.3% 상승했다.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0월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해, 2024년 7월(2.8%) 이후 1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20.04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특히 신선과실과 생선, 해산물 등의 상승폭이 컸다.

품목별로 쌀이 4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사과(30.3%), 고등어(22.9%), 쌀(15.5%) 등이 상승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1500원 수준에 육박하면서 폭등한 기름값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11.5%, 5.6% 올랐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3에서 118.04로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2.9%) 이후 16개월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120.74로 3.0% 올랐다. 식품(3.8%) 물가 상승폭이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전남 역시 신선 먹거리와 기름값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21.5%), 보험서비스료(16.3%), 쌀(13.4%), 돼지고기(11.6%), 경유(11.3%), 휘발유(5.7%) 등이 올랐다.

반면 당근(-43.9%), 유치원납입금(-35.5%), 무(-30.1%), 토마토(-20.8%) 등은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30명, 6개월간 다양한 프로젝트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5월 초 선발된 15기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30명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6개월 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회공헌 활동과 브랜드 홍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홍보대사들은 고3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 생활 꿀팁 및 금융교육, 중북·말복맞이 삼계탕 무료배식 봉사활동,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부스 운영, 광주전 플로깅 봉사활동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36회의 활동을 진

행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조별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및 활동 소감을 발표했으며,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팀·우수 홍보대사도 시상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460명 이상의 지역 청년 인재를 배출했다. 또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2026년 3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제15기 홍보대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됐지만, '광은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동반자로 생각한다"며 "홍보대사 기간 동안 쌓은 경험이 앞으로도 큰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가격 대신 양 줄이기 꼼수 차단
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져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중량 표시 강화 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 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

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러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바 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천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제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품질 손실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중량 표시제'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제보 받는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장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1년 이상 리스·렌트차도 대상
다자녀 가구 할인도 3년간 도입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추가 적

용한다.

아울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공정·회계부정 제재시 기업 방어권 강화

금융위,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조사·제재할 때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TF는 지난 8월 말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은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실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형벌이나 감사인 과징금 수준이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감리 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방식도 형사 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엄정한 시장 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기업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TF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국산 보조배터리 일부, 과충전하면 폭발 위험

"사양 맞는 정격 충전기 사용해야"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때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회로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

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로,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보호기능이 상실돼 발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조사에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렌텍의 '대용량 광트루 4포트 LCD 전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엘의 '20000mAh 전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TYPE C)'(CSPB-002C) 등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상위노출 제품으로 선정했는데, 보호회로 손상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과충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로렌텍, 아이콘스는 해당 제조 연월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리큐엘, 명성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사용 설명서나 표시사항에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노란우산 가입 폐업·노후대비
소득공제도 챙기세요”
중기중앙회 분기납 가입 독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올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폐업 대비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달 중 '노란우산'에 분기납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하도록 돕는 공제 제도로, 이른바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납입액 조정도 가능하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납부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994.93	(+74.56)
▲ 코스닥	928.42	(+6.04)
↓ 금리(국고채 3년)	3.022	(-0.023)
↓ 환율(US D) <오후 4시 49분 기준>	1468.35	(-1.55)